

의원33명 결의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원웅, 민주당 김덕규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28일 '북·일 수교협상과 관련 일제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결의안'이라는 이례적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당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종의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북·일 수교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북·일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한·일기본조약이 협상의 준거틀로 제시돼서는 안된다고, 한·일 기본조약이 북·일 수교에 장애가 돼서도 안되고 협상모델이 돼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 때 맺어진 각종 조약은 무효"라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당시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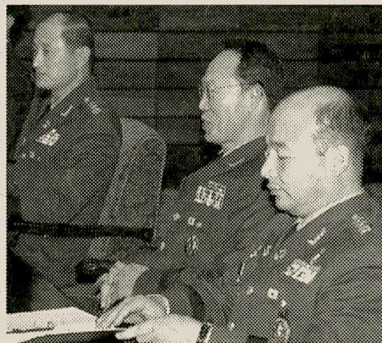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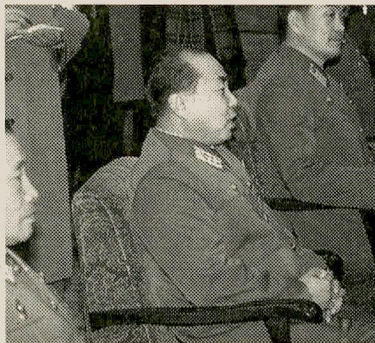
이날 제출된 북일수교 결의안은 크

“북·일수교, 한·일조약 닳은꼴 안돼 일본 사과·배상·문화재반환 반드시”

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우선 한일합방조약(1910), 을사조약(1905), 정미7조약(1907) 등 당시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은 계기가 된 조약들이 무력

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원천 무효'임을 북·일 수교 때 선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결의는 종군 위안부, 징용,



경의선 잇기 마주앉은 군 28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김경덕(오른쪽 가운데) 국방부 군비통제차장과 북쪽 단장인 류영철(왼쪽 가운데)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이 환담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기자단

징병 등 가혹한 식민통치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먼저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 강점 때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노역의 실상을 밝히고 사상자의 진상을 규명할 것과 나아가 강제연행된 수백만 동포의 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차별적 제도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1965년 6월22일에 맺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제조약 및 협정'은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식민지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배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동 조약은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합법화시키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고 통탄하면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일조약이 올바른 북·일수교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